



Y주최 농정토론회

YMCA 하면 우리 국민중에 일제시대에는 독립운동을, 광복후에는 시민운동단체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Y가 농촌농민운동을 해온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1박 2일간 수유리 아카데미하우스에서 UR이후의 우리나라 농촌·농민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는데, 이 토론회를 YMCA가 주최하였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문제가 이제 농민만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Y가 15년전 농촌사업을 시작하면서 세운 목표가 “정신적 소생, 사회적 단결, 경제적 향상”이었는데, 이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Y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바른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비농민의 혜안에 놀랄 뿐이다.

이날 토의된 내용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첫째, 80년대 우리나라 농정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농외소득에 핵심을 두고 농공지구, 관광농업 등을 주장하다 보니 정작 농업은 발전하지 못하고 개방준비도 안하고 있다가 봇물 터진 것처럼 되었다.

농외소득을 강조하면 영농의 의욕이 없어지고, 여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불확실한 성과로 땅값인상만 기대하게 된다.

둘째로, 수입개방의 여건에서 상업적 전업농 육성이 될 수 있나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불투명한데 자금을 대주는 것은 망하는 길을 재촉하는 것으로 여전 나쁘게 하고, 돈 벌려 주어 육성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주요 작목을 포기하고 잡다한 것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도 말도 안된다.

이번 UR협상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 농업을 보니 사양산업이 아니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 나라의 기본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배웠다. 농정당국의 패배주의가 문제이다.

셋째로, 우리나라 농업의 문제는 대외모순이 아니고, 국내모순이 기본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농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발전의 원리에 따라 농업의 위치를 찾아내고 농가소득이 올라가도록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50대 재벌이 GNP의 15%를 생산하고 농민은 12%를 생산한다. 그런데 50대 재벌이 쓰는 돈은 40%인데 비해서, 농민은 10%도 안된다. 농업의 인력, 교육, 기술개발 등에 많은 돈이 투자되어야 한다.

넷째로, 신선농산물, 계절적으로 생산되는 농산물, 계절·연도별로 가격진폭이 큰 농산물을 물가대책에 넣고, 물가지수에 신경쓰는 정책은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농산물가격은 연간 평균 가격으로 하든가 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는 UR협상 이전에 농민과 정부의 협상이 국내에서 먼저 이루어져 장기

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에따라 세부 계획을 세워 공표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돈은 외자도 쓸 수 있고, 농민·농협·정부가 내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도시여성과 농민단체의 여성들이 연계해서 조직화 하고, 이를 유권자들이 국회의원을 올바로 뽑고, 감시·격려·정보 제공을 통해 의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각기 제 역할을 하도록 하여 하향식 정책결정과정을 상향식으로 바꾸어 농민욕구에 부응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농정의 목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정부·학계·연구기관 등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선진공업국은 동시에 선진농업국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하며, 문화전통의 뿌리는 농촌이라는 철학이 있어야 한다.

미국의 의도대로 드杵의장안대로 UR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겠지만, 타결된다 하더라도 농산물의 특수성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해서 다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라 생각대로 모든 농산물이 자유롭게 교역이 이루어질 수도 없으며, 보조금을 없애면 어느 나라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게 마련이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농업의 역할, 위치를 파악하는 철학이 있어야 하며, 농산물은 수입개방 추세에서 수입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장기적 시각에서 보아야), 국내에서 농업과 공업의 비교우위에서 수입되는 것이다. 19C 영국이 공산품을 수출하며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농산물이 경쟁력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10년전 도시과밀화를 막는다고 도시빈민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농

66

10년전 도시과밀화를 막는다고 도시빈민들에게 농촌으로 돌아가면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농촌으로 간 사람들에게, 이제는 농발대에 의해 농촌을 떠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이러한 정책으로는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66

촌으로 간 사람들에게, 이제는 농발대에 의해 농촌을 떠나면 지원해 주겠다고 하니 이러한 정책으로는 국민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

농촌의 삶의 질을 바로잡는 사회정책과 스스로의 살아남을 수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제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먹거리 문화가 바뀌고 밥상의 식민지화로 맛의 문화를 잊어버리면 정신문화도 사고방식과 성격까지도 바뀌어 생활문화, 민족의 자주성을 지킬 수 없다.

최근 도시과밀, 소비지향적 퇴폐문화의 범람은 농정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다. UR이후의 대책으로 일본, 대만 농정의 실패사례를 성공사례인 것으로 착각하고 도입하는 농외소득증대나 농공단지육성 등과 농업의 수출산업화라는 바람잡이들(수출한다 해도 혜택을 보는 농민은 10% 미만이다)이 농민을 우롱하는데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돼지고기의 최대 수입국인 일본에서 돼지고기를 수입하게 되어 우리는 몇일 후면 일본산 돼지고기를 맛보면서 대일 돈육수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국내 돈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일본산 돼지고기를 수입해야 하느냐를 논하게 될 것이다.